2011년 세계경제 기상도
Two Speed World의 리스크와 기회

경제연구실 jplee@lgeri.com

2011

신흥국 인플레 발생 가능성
유럽 국가부채위기 지속
금속 · 곡물의 가격 급등 리스크

아시아 경제 호조와 내수시장, 인프라시장 확대
자원 보유국의 개발 프로젝트 재시동
녹색 산업의 성장 지속과 전기자동차 원년
제품 및 서비스의 스마트화

재정확대 효과의 소진과 신흥국의 금융긴축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기 조정이 더블딥으로까지 빠질 가능성은 낮으며, 2011년 하반기에는 선진국의 금융완화 효과 지속과 신흥국의 긴축정책 일단락으로 세계경제의 하강세도 점차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신흥국의 인플레 발생 가능성, 유럽 국가부채 위기, 금속·곡물의 가격 급등 리스크 등은 여전히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으로 남아 있다. 2011년 세계경제는 선진국의 부진과 개도국의 고성장세 지속이라는 차별화가 다소 심해지겠지만 각종 리스크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평균적으로는 3%대 후반의 건실한 성장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각종 리스크 속에서도 세계경제를 지탱하는 기회 요인으로 △ 아시아 경제 호조와 내수시장, 인프라시장 확대 △ 자원 보유국의 개발 프로젝트 재시동 △ 녹색 산업의 성장 지속과 전기자동차 원년 △ 제품 및 서비스의 스마트화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재정 확대 효과의 소진과 신흥국의 금융 긴축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2011년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 회복세

이지평 수석연구위원 jplee@lgeri.com

2011년 상반기까지는 경기조정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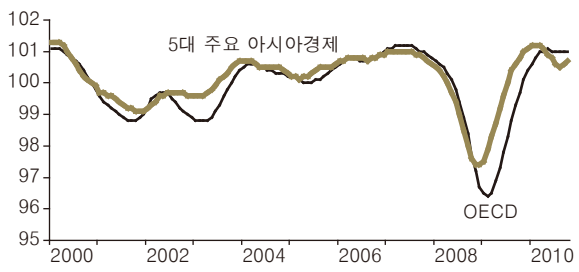
2010년 상반기를 정점으로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는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정 국면은 2011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리먼 쇼크 이후 선진국에 앞서 회복세를 나타냈던 신흥국의 성장세가 2010년 중반부터 둔화되면서 세계경기의 조정이 뚜렷해졌다. 경기회복을 주도한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의 효과가 일단락된 데다 물가상승 압력으로 신흥국들이 잇따라 금리인상에 나서면서 성장 활력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도 막대한 재정지출 확대의 효과가 소진되면서 경기회복세가 약화되었다.

내수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에 따라 개도국의 물가상승 압력이 당분간 지속되면서 2011년 초반까지 긴축 기조가 이어질 전망이다. 유럽의 재정위기 리스크도 계속되면서 선진국 경기의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2011년 하반기부터는 완만하게나마 세계경제가 다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신흥국의 긴축 기조가 2011년 상반기 중 일단락될 전망이다. 인도는 2010년 12월에 금리인상 정책을 일단 중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중국의 경우 내년 중반 이후까지 긴축 기조를 계속 강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흥국 긴축정책의 일단락과 함께 2011년 중반에는 선진국에서도 급격한 재정 지출 위축에 따른 수요 둔화 효과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미국 등의 과감한 금융완화 정책과 이에 힘입은 주식 등 각종 자산 가격의 상승세가 어느 정도는 소비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경우 수익성 측면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활동도 회복될 것이다.

< 1> OECD



주 : Major Five Asia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 기준임.
자료 : OECD

"2011년 하반기까지는 신흥국의 긴축정책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여 세계경제의 하강세도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과 개도국의 성장 격차 지속

2011년에는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성장 격차가 4.1%p로 2010년 3.7%p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버블 붕괴, 은행부실화에 이어 재정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유럽의 경우 소비와 투자의 빠른 회복이 어려울 것이다. 금융완화의 효과로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보이는 미국의 경우에도 실업률이 2011년에 크게 개선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러한 고실업 문제는 소비 부진과 함께 부동산 버블 붕괴를 청산하기 위한 가계의 구조조정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일본도 그린카 보조금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약해지는 데다 디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면서 경제 활력의 제고가 어려울 전망이다.

< 1> (%)

	2009	2010	2011		
			상반기	하반기	연간
세계경제(PPP)	−0.6	4.7	3.7	3.8	3.7
세계경제(시장환율)	−1.4	3.7	2.7	2.8	2.7
선진국	−3.4	3.0	1.8	1.9	1.9
미국	−2.6	2.7	2.2	2.4	2.3
일본	−6.3	4.3	1.0	1.1	1.1
유로	−4.1	1.6	1.0	0.8	0.9
개도국	2.5	6.7	5.9	6.0	6.0
아시아	6.9	8.9	7.6	7.8	7.7
중국	8.7	9.8	8.4	8.5	8.5
인도	7.4	8.9	9.1	9.0	9.1
동남아 등	1.7	6.5	4.0	4.9	4.4
중남미	−1.7	5.2	4.3	4.0	4.2
브라질	−0.2	7.5	5.0	4.2	4.6
중동 · 북아프리카	2.0	4.3	4.9	5.3	5.1
아프리카(사하라이남)	2.6	5.2	5.0	5.1	5.0
CIS	−6.4	4.6	4.5	4.7	4.6
러시아	−7.9	4.2	4.1	4.3	4.2
기타 CIS	−3.1	5.5	5.5	5.7	5.6
동구	−3.6	3.2	3.4	2.8	3.1
국제유가(WTI, $/1배럴)	61.9	79.5	86.9	90.6	88.7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경제의 전반적인 부진 속에서 개도국은 내수확대에 기반한 성장세와 함께 개도국간 무역도 활발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기록(2011년 중국 8.5%, 인도 9.1%)할 것이다. 선진국의 금융완화로 풀린 자금의 유입을 관리하면서 자산 버블을 억제하는 정책이나 금리인상을 통해 물가 안정에 주력하는 정책이 성장세를 크게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점차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중국 및 인도의 고성장과 공업화가 러시아, 중남미, 중동, 아프리카 등 자원보유국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중국보다 저렴한 임금수준을 가진 인도차이나, 서남아 등의 경제개발을 자극할 것이다. 개도국 내부에서의 자율적 성장 파급 경로가 강화되는 것이다.

2011년 세계경제는 평균적으로 3%대 후반의 견실한 성장세를 보이겠지만 그 내면에는 선진국의 전반적 부진과 개도국의 호조라는 서로 상반된 경제상황이 동거하는 모습(Two Speed World)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

> 내수 성장으로의 구조전환은 신흥국들의 인플레 발생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신흥국 인플레 발생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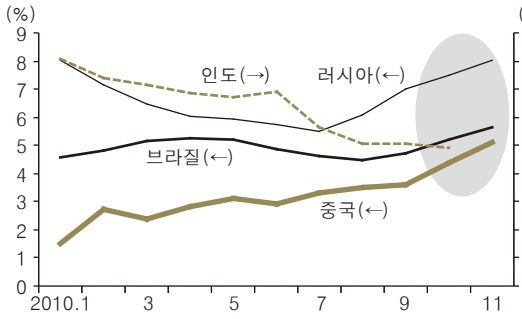
강중구 책임연구원 jkookang@lgeri.com

선진국 대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신흥국의 경우, 과도한 외환자금유입과 경기 과열에 따라 자산 버블 및 인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선진국들의 양적 금융완화정책으로 풍부해진 국제 유동성이 신흥국으로 유입되면서 직접적인 통화량 증가뿐 아니라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소비확대 등으로 이어져 인플레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외환유입은 신흥국 국채금리를 저금리로 유지되도록 만들어 각국의 통화정책 유효성을 낮추게 한다는 점에서도 우려스럽다.

내수성장으로의 구조전환 역시 신흥국들의 인플레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글로벌 위기를 겪으면서 중국 등 신흥국들은 수출 주도 성장에서 점차 내수성장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한 임금 상승이나 소비진작책은 비용 및 수요 측면 모두에서 인플레 압력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특히 풍부한 유동성과 겹쳐 국내물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물론 외환유입 등으로 자국통화가 절상되면서 수입물가가 안정되는 측면이 있으며, 중국을 비롯한 주요 신흥국이 거시경제 운영에서 크게 실패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에는 신흥국들의 긴축정책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미국 등 선진국 경기의 호전에 따른 양적금융완화 압력이 약해질 것이다. 신흥국들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높은 인플레이션율을 보이겠지만 최근의 인플레 압력요인만으로 물가상승이 가속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2011년 하반기 이후에 선진국 경기가 예상외로 부진하면서 미국이 양적 금융완화조치를 추가적으로 실시(QE3)하고 일본, 유럽도 이를 따라가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 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신흥국에 대한 자금 흐름이 더욱 불안해지면서 高인플레 발생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우려가 있다. ■

< 2> BRICs



자료 : 미국 노동부 통계

> 막대한 금융안정 기금으로 유럽국가부채 위기를 막을 가능성이 높으나 투자자의 불신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 국가부채위기 지속

유승경 연구위원 seungyoo@lgeri.com

국제금융시장은 유럽의 국가부채위기가 스페인 등으로 확산될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2011년을 맞이했다. 물론 유럽중앙은행이 각국 국채의 매입을 확대하고 있고,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회원국들이 안정화 조치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적어도 2011년 상반기까지는 시장동요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금융혼란으로 빠져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구제금융을 중심으로 한 위기 극복책들은 유로존의 제도적 결함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다. 유로존 16개국이 단일통화를 사용하고 있지만 각국간의 생산성, 경상수지 등의 격차는 축소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유로존의 제도적 결함을 교정할 근본적 개혁방안 마련이 지연되고 위기국가들이 재정 정상화와 부채상환 능력 제고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 2011년 하반기로 갈수록 유럽연합의 지원 정책이 점차 무력화될 수 있다. 포르투갈, 스페인 등도 새로운 구제금융 대상국에 포함되면서 위기가 유럽 전체로 파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유럽의 부채 위기가 미국경제의 취약한 상황과 맞물린다면 세계적 위기로 파급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IMF 등이 적극적 지원에 나설 것이다. 따라서 2011년 내에 위기가 전면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따르더라도 유로존은 1% 미만의 저성장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의 경우 이탈리아까지 위기가 파급되지 않는다면 금융안정기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 충분한 상황이지만, 투기세력의 유럽 각국 채권에 대한 공격이 여러 차례 가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유로화는 약세를 보이고 미국과 일본 또한 추가적 금융완화에 나설 수 있다. 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 주요국간의 환율 약세 유도 경쟁에 어느 정도 제동이 걸렸다고 할 수 있으나 유럽의 국가 부채 리스크와 유로화 약세가 경제대국들 간의 환율 전쟁을 재차 유발할 가능성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

> “수급이 불안한 구리, 희토류 등의 금속이나 밀 등의 곡물이 가격이 급등하기 쉬울 것으로 보인다.”

금속·곡물의 가격 급등 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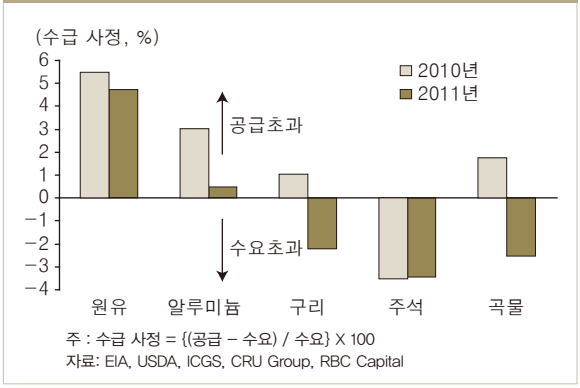
이광우 선임연구원 kwlee@lgeri.com

2011년에는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자원 가격의 급등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다. 석유의 경우에는 세계경제 성장률 하락과 각종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로 2011년 수요 증가율이 1%대 중 · 후반으로 2010년보다 약 1%p 낮아질 전망(IEA, EIA)이다.

그러나 일부 금속과 곡물에서는 공급 부진이 나타날 것이다(〈그림 3〉 참조). 구리와 주석에서는 그동안 생산량 확대를 위한 투자가 미진했기 때문에 2011년에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ICGS(국제구리연구그룹)는 세계 구리 수요가 공급을 약 44만 톤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철강관련 전문 조사기관인 CRU 그룹은 세계 주석 수요가 공급을 1만 2천 톤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희토류의 경우, 세계 공급의 97%를 차지하는 중국이 자국 수요 충족을 우선하기 위해 수출쿼터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데다 2011년부터는 수출 관세를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일본과의 영유권 분쟁 등 정치적 갈등을 이유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가뭄으로 인해 러시아가 밀의 수출 금지 조치를 2011년 6월까지로 연장한 가운데 최근 호주 곡창지대에서 홍수가 발생하는 등 주요 곡물 생산국에서 작황부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구리, 주석 등 기초금속, 희토류 등 희소금속, 밀 등 곡물에서 공급 부족으로 인해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기상이변이나 생산국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 단기 공급 차질까지 겹친다면 이들 원자재 가격은 단시간 내에 큰 폭으로 급등할 것이다. 더욱이 미국 등 주요국의 양적완화 조치로 글로벌 유동성이 늘어난 상황이다. 공급 부진과 더불어 글로벌 유동성이 이들 원자재를 대상으로 집중될 경우에는 가격 상승세가 더욱 증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 3>



주 : 수급 사정 = {(공급 − 수요) / 수요} X 100
자료: EIA, USDA, ICGS, CRU Group, RBC Capital

"통화가치가 상승하고 있는 아시아 각국의 소비신장세에 글로벌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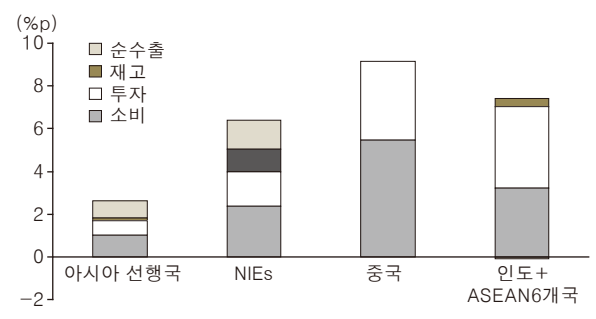
아시아 경제 호조와 내수시장, 인프라시장 확대

윤상하 선임연구원 shyoon@lgeri.com

아시아 국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타격이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 문제도 덜 심각한 편이다. 중국과 인도 등 거대 개도국들이 내수 부문에서 큰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고, 인접국들은 이들과의 교역 비중 확대를 통해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 또한 몇몇 국가들(중국, 인도네시아 등)은 막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위기 이전만큼은 아니어도 2011년 신흥 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률이 7.7%로 전망되는 등 여전히 높을 것으로 보여 전세계 인구의 53.4%(2010년 기준, 일본 제외)가 거주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 글로벌 기업들에게 다양한 기회가 창출될 전망이다.

소비는 아시아를 설명하는 새로운 키워드다. 아시아 지역의 전체 GDP 성장에서 소비가 기여하는 부분이 점점 커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2010년과 2011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 약 9.2% 가운데 소비의 기여도가 5.5%p 가까이 될 전망이다(〈그림 4〉 참조). 같은 기간 인도와 아세안 지역 성장의 절반 정도를 소비가 설명할 것이다. 아직 신흥 아시아 시장은 선진국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빠른 성장세와 거대한 인구 덕분에 글로벌 기업들의 매력적인 타깃이 되고 있다. 특히 2011년 이후 주목할 부분은 선진국들이 양적 완화 등으로 막대한 자금을 공급하면서 통화 약세를 보이는 반면, 상대적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기반으로 하는 신흥국들의 통화가 강세를 보이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의 경우 앞으로 글로벌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차원에서 매년 2~3%의 위안화 절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경제의 펀더멘털이 양호한 여타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가치 또한 동반 강세를 보일 것이다. 아시아 신흥국들의 통화 강세는 구매력 확대로 이어져 향후 이들의 교역재 수입 및 소비가 더욱 확대될 전

< 4> 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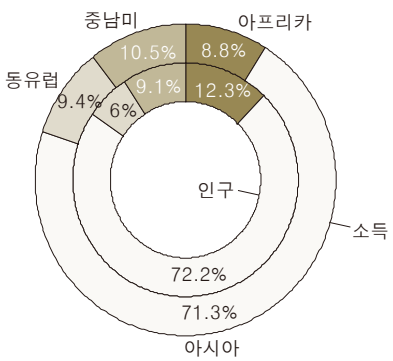
주 : 2010~2011년 평균임
자료 : IMF, LG경제연구원

> “도시화와 함께 볼륨존, BOP 등의 소비시장과 인프라 관련 시장의 급성장이 기대된다.”

망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들의 늘어나는 구매력을 시장진출 확대의 기회로 삼기 위해 신흥국 거대 도시의 거주자들에 주목하고 있다. 메가 시티(Mega Cities)들은 인접 위성 도시들과 생활권을 형성하면서 그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있으며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 도시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면서 인근 지역 전체가 메가 리전(Mega Region)화되는 가운데 거대한 BOP(Bottom of the Pyramid: 저소득층 시장)와 볼륨존(Volume Zone: 중간소득층 시장), 상류층이 공존하는 공간이 되어가는 중이다(〈그림 5〉 참조). 시장과 지역의 특성, 문화적 맥락, 소비자의 기호 등을 잘 이해하고 소득 수준별 차별화 전략을 적절히 구사하는 글로벌 기업만이 신흥국 메가 리전에서 성공하게 될 것이다.

< 5> BOP



주 : 소득은 PPP 기준. 2007년 기준임.
자료 : World Resource Institute

메가 리전의 빠른 성장은 인프라 부문에서 또 다른 기회를 창출한다.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전력, 수도, 도로, 주택 등 사회기반 시설의 수요가 증가하는데, 신흥 아시아 지역에서의 인프라는 이제 겨우 유년기를 벗어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BOA(Bank of America)에 따르면 향후 3년간 중국에서만 인프라 투자가 약 3조 9천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그 중에서 에너지 및 전력, 운송 및 물류, 수도 및 환경 분야에 대부분의 투자가 이뤄질 것이다. 인도에서도 같은 기간 동안 3천억 달러 이상의 인프라 투자가 계획되어 있다. 인도는 아직도 인구의 약 40% 이상이 주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 전국에 산재해 있으며 매년 40만 명 이상의 어린이들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해 수인성 전염병에 시달린다. 여타 아시아 신흥국들 가운데서도 막대한 인프라 건설이 필요한 곳이 많다. 중앙 및 지방정부 주도로 인프라 투자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원자재 수요가 함께 늘어날 것이며 신흥국 소비, 인프라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

"중동국가를 중심으로 소비와 투자 수요의 확대가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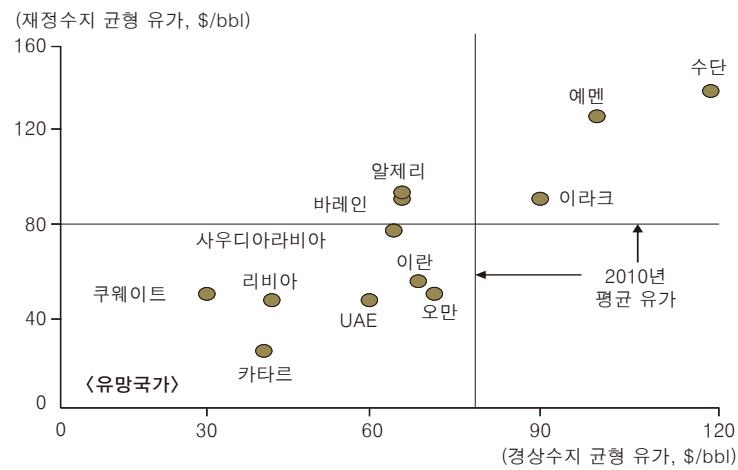
자원 보유국의 개발 프로젝트 재시동

이광우 선임연구원 kwlee@lgeri.com

개도국을 중심으로 세계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면서 자원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자원 보유국들의 경제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중동, 러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지역들의 2011년 경제 성장률이 세계경제 성장률 3.7%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 확대, 외자 유입 등에 따라 자원 보유국들의 소비와 각종 투자 프로젝트가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글로벌 경기침체 동안 나타났던 고용사정 악화와 신용 경색 등이 수출기업이나 국영은행들을 중심으로 점차 개선되고 있다. 자원 가격 상승, 글로벌 유동성 증가 등 대외경제 환경 개선의 온기가 점차 내수 부문으로 전파되고 있는 것이다. 고용사정 개선과 임금 상승으로 가계 소득이 늘어나고 구매력도 높아지고 있다. 매출이 증가하고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되면서 현지 기업들은 투자를 확대하는 중이다.

< 6>



주 : 수지 균형 유가보다 낮게 위치한 산유국은 흑자를, 수지 균형 유가보다 높게 위치한 산유국은 적자를 기록
자료 : IMF

이러한 소비와 투자 활력은 국제유가 대비 원유 생산비가 낮은 중동을 중심으로 확산될 것이며,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모두 흑자인 산유국일수록 강한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다(〈그림 6〉 참조). 다만 아직은 유럽발 재정위기와 중국 긴축정책 등 글로벌 경기를 하강시킬 불안 요인들이 지속되고 있어 대형 프로젝트 등은 점진적으로 회복되다가 2011년 하반기 이후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원 보유국의 정부 투자 역시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

> “자원 보유국의 각종 개발 프로젝트 추진과 주변국으로의 수요 확산이 예상된다.”

나타난 자원가격 급락을 경험 삼아 이들 정부는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동안 자원 보유국들은 환율 절상과 이로 인한 제조업의 가격 경쟁력 약화라는 '자원의 저주'를 탈피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이번 세계경기 침체 과정에서 자원 가격 급락에 자원 의존형 경제가 얼마나 취약한지 경험했기 때문에 산업 다각화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자원 보유국들은 제조업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도로, 전력망 등 인프라 확충에 투자하고 있으며 외자유치와 기술개발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0년 8월 산업 다변화,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운송 인프라 확충, 수자원 개발 등에 3,850억 달러를 투자하는 5개년 개발계획을 승인하였다. 기초과학과 우주항공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는 첨단 산업단지(스콜코보) 육성, 나노기술 개발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쿠웨이트는 향후 5년간 900억불 규모의 정유공장 현대화 프로젝트를, UAE는 170억 달러 규모의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칠레, 카타르 등에서는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원전 등 발전 플랜트 사업이 새로이 추진되거나 재추진되고 있다. 중동 산유국들은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에 대비하고 자원 고갈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리먼쇼크 이후 자원 보유국의 각종 개발 프로젝트는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향후 원자재 가격의 회복, 성장세 호조, 글로벌 유동성 확대에 힘입어 재차 활기를 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자원 보유국 주변에 있는 국가들도 자원 보유국의 경제 활력에 영향 받아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들 주변국들은 자원 보유국에 인력, 곡물 등을 수출해 성장을 이루고 있다. CIS 지역 가운데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러시아에서 일하는 자국민의 임금 송금액이 각각 GDP의 50%, 30%에 이르고 있다. 자원부국의 성장 혜택을 받아 주변국들도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

"포스트 교토의 불발에도 불구하고 녹색산업 성장 모멘텀은 유지될 전망이다."

녹색 산업의 성장 지속과 전기자동차 원년

이지평 수석연구위원 jplee@lgeri.com

2010년 말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된 제16차 UN 기후 변화 조약국 회의(COP16)에서 각국은 2012년 만료될 '교토의정서'를 대신하는 새로운 온실가스 배출 억제 협정의 합의에 실패했다. 그 결과 배출권 거래 가격이 급락하는 등 녹색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태양광 발전 등 그린 산업은 아직 코스트 경쟁력이 부족하여 환경 규제와 정부 지원이 필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이다. 새로운 지구온난화 방지 협정의 불발과 신재생 에너지 시장을 주도해 왔던 유럽 각국의 극심한 재정 및 금융 위기로 인해 그린 산업의 성장 활력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주요국들은 자체적으로 환경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으며, 녹색 산업은 원자재의 공급 불안 해소, 새로운 성장 산업 육성이라는 국가적 전략 목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녹색 산업의 성장 모멘텀은 2011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한 온실가스 배출규제 도입에 부정적인 미국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연장하기로 하고 승용차의 연비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이 그린카의 성장세를 뒷받침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일례로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무공해 자동차(ZEV: Zero Emission Vehicle)의 비율을 2009~2011년동안 11%를 달성해야 한다는 규제가 존재한다.

EU의 경우 그동안 그린카 가운데 고효율 디젤 자동차가 성장해 왔으나, EU 차원의 연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의 강화로 유럽 각국 자동차업체들도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자동차의 개발 및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재정사정이 악화된 스페인의 경우 태양전지 도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급감했으나 프랑스, 이탈리아에서는 정부 지원에 힘입어 태양전지의 도입량이 확대되고 있다.

일본도 에너지 절약 주택에 대한 정부 보조금 덕분에 태양전지 출하량이 2010년에 20%를 넘는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2011년에는 경기부양책으로 실시된 그린카와 그린 가전에 대한 보조금이 삭감되면서 이들 제품의 판매 급증세가 둔화될 것

> “2011년에는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100만대를 초과하고 전기차도 급증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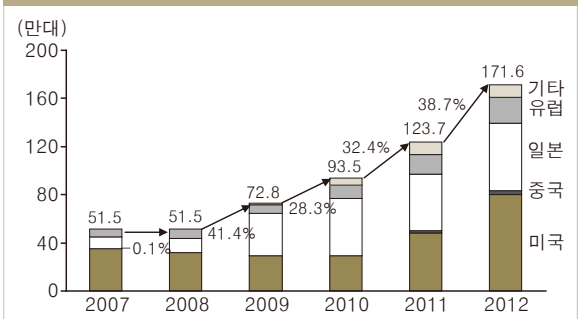
이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2011년에 탄소세를 도입할 방침을 세우는 등 환경 규제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도 자체적인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에 나서는 한편 풍력 발전, 태양전지, 전기차 등 주요 그린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2015년까지 650억 위안, 2020년까지 1,000억 위안을 투입하여 전기자동차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일본에서 먼저 보급된 차세대 자동차가 세계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에서는 2011년부터 플러그 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포함한 전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소비가 본격화되면서 일본시장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 세계 전체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 규모도 처음으로 10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그림 7〉 참조).

유럽이나 중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전기자동차 시장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은 도시형 단거리 운전 습관이 강해 소형 전기자동차의 선호도가 미국에 비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기존 휘발유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서는 선행기업을 따라 잡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정책적으로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주력할 것이다.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은 2010년의 2만대 수준에서 2011년에는 9만대, 2012년 22.2만대로 급증세를 보일 전망이다(〈그림 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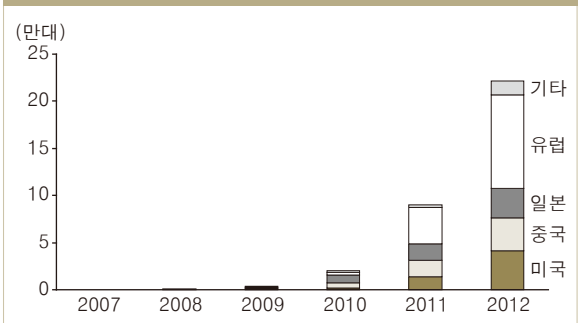
그린카 이외에도 LED조명의 보급 확대, 미국의 스마트 그리드 실험 및 이에 대응한 각종 제품 개발 등 그린 기술을 활용한 제품개발이 늘어나면서 새로운 성장 사업을 개척하려는 기업의 도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

< 7>



자료 : J.D. Power and Associates, Drive Green 2020:More Hope than Reality?, November 2010

< 8>



자료 : J.D. Power and Associates, Drive Green 2020:More Hope than Reality?, November 2010

"전자기기의 스마트화는 성숙된 내구재 시장에서도 수요를 자극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제품 및 서비스의 스마트화

이지평 수석연구위원 jplee@lgeri.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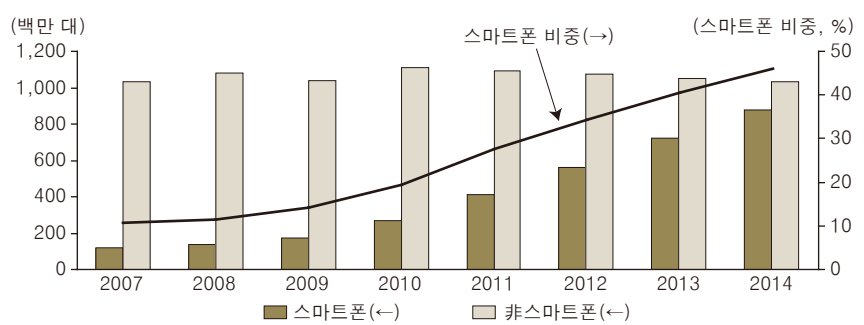
정보 · 서비스 · 에너지의 스마트화

2010년에는 그동안 얼리 어덥터에게만 한정적으로 보급되었던 스마트폰이 대중화의 물결을 타고 널리 보급되면서 IT 전반, 유통, 컨텐츠 분야 등으로 영향을 확대하였다.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 세계 휴대폰 시장은 2009년도의 0.9% 감소에서 2010년에는 10%를 넘는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에 5%를 넘는 감소세를 기록한 선진국 시장에서도 2010년에는 2% 정도의 증가율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이후에도 기존 휴대폰을 대체하면서 스마트폰 시장의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전자기기의 스마트화는 성숙된 내구재 시장에서도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새로운 트렌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스마트화는 휴대폰뿐만 아니라 모바일 단말기, 스마트 TV, 스마트홈(백색 가전의 스마트화 포함) 등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전개될 각종 전자기기, 자동차, 기계 등의 스마트화는 3가지 포인트가 초점이 되면서 내구소비재 시장을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정보의 스마트화이

< 9>



자료 : Gartner

> “스마트화가 TV, 자동차 등 다양한 기기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다.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정보의 스마트화 흐름은 기존의 PC 인터넷 시대와 달리 언제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뿐 아니라 개인의 취향이나 위치정보에 따라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맞춤 기능, 개인의 취향 및 생활을 추적할 수 있는 Lifelog 기능, 각종 기기간에 정보를 공유 및 동기화하는 기능, 정보의 확산 속도 제고 등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정보의 스마트화는 유저가 인터넷 공간으로부터 막대한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취사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며, 2011년에는 TV, 자동차 등 다양한 기기로 확산될 것이다. 클라우드 컴퓨팅 등 각종 정보기술을 활용하면서 △ 시간축 △ 공간축 △ 친밀성축(SNS의 추천 기능) 등의 측면에서 부가가치가 추구될 것이며, 특히 아는 사람의 추천이라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SNS 시장에서 기존의 페이스북과 신흥세력, 각국의 SNS 업체간의 경합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는 서비스의 스마트화이다. 정보의 스마트화는 그 자체가 새로운 컨텐츠 서비스를 유발하는 한편 서비스 형태의 혁신도 유도할 것이다. 스마트폰 위치 정보와 지역정보를 연계하여 한정된 시간에 제공되는 할인 쿠폰 서비스의 급성장에서 볼 수 있듯이 음식점, 미용실, 인력소개 등의 각종 서비스 산업도 가상공간과 연계되면서 스마트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는 에너지의 스마트화이다. 태양전지, 풍력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과 함께 지역차원, 국가차원에서 에너지 네트워크의 정보화가 가속되고 있다. 에너지의 공급과 수요의 흐름을 지적으로 관리하여 에너지의 낭비를 억제하는 시도들이 확산될 전망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대규모 스마트시티 건설 프로젝트 등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하여 전력망의 지능화, 가정의 자체적 에너지 관리시스템 도입 등이 모색되고 있다.

품질 안정성 중시하는 새로운 스마트 기기 수요 확대

2011년에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는 정보 · 서비스 · 에너지의 스마트화는 새로운 내구재에 대한 수요를 유발하기 때문에 각국의 기업들이 대응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미국은 전통적으로 전력 인프라가 한국이나 일본에 비해 낙후되

"에너지의 스마트화 흐름과 함께 AMI가 보급되고 이에 대응한 전자기기, 자동차의 스마트화가 더욱 진행될 것이다."

고 에너지 낭비가 심하다는 상식이 지배적이었으나 전력망의 스마트화에서 세계를 선도하기 시작했다. 그 첫 단계로서 가정과 전력망을 스마트화하는 AMI(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시스템의 보급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스마트미터, thermostat 등의 각종 제어기기와 데이터 관리, 표시 시스템 등을 망라한 기기, 그리고 홈 네트워크를 포함한 통신 기능을 포괄한 것이다. 이 분야의 강자인 Silver Spring Networks와 같은 신흥기업 가운데 제2의 시스코시스템즈로 성장할 기업이 나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을 정도이다. 기존 기업들 가운데서도 GE나 구글(Google PowerMeter)이 관련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에너지를 결합한 홈 네트워크 통신 인프라의 구축과 함께 각종 백색가전의 네트워크화도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구글은 냉장고 등의 백색가전에 Android를 장착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2011년에는 가정에서 충전이 가능한 GM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보레 볼트가 본격적으로 보급되고 AMI로 지능화된 가정의 전력망과 네트워크를 통해 전력을 주고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각종 기기의 스마트화가 에너지, 서비스, 개인의 깊숙한 사생활 영역까지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하드웨어의 품질 안정성에 대한 요구 또한 강화될 것이다. ebook 등의 모바일 단말기나 스마트폰 등은 PC에 비해 품질이나 보안 측면에서 보다 높은 안정성을 갈망하는 소비자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 애플은 PC보다 안전하게 인터넷 가상공간에 접속하여 정보의 스마트화를 주도할 수 있는 하드웨어의 수직적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애플 자체는 아웃소싱을 많이 활용하며, 적지 않는 품질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고려한다면 2011년에는 하드웨어에 강한 아시아 기업들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와 자체 하드웨어 역량을 활용해서 기초적 품질 제고에 힘쓰는 한편 보안성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면서 스마트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www.lgeri.com